

美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대책 발표

-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원, 현기차 상생자금 1조원)
→ '25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은 기존 13조원 → 15조원 확대
-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25.6→12월) 및 지원비율 확대(20~40→ 30~80%)
-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말까지 연장
-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정부는 4.9일(수)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①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25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 금용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② 수요진작, 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美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25.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③ 투자환경 개선 및 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25.上)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5~’29)」(’25.3분기)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천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4 美 관세 조치 협상대응 강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별첨】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320)
		담당자	서기관	김효선 (044-203-4326)
			사무관	명지혜 (044-203-4322)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044-215-4531)
				양지연 (044-215-453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3-4033)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김 효 (044-203-4041)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강 찬 (044-201-6882)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영록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0-5725)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규 (044-204-7500)
	담당자	서기관	성항용 (044-204-750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1-38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5)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준경 (042-481-5182)
	담당자	사무관	문해진 (042-481-3917)

